

4. 통일정책관련 주요 선언 및 제의

(1) 『평화통일 구상』 선언

/ 1970.8.15 박정희 대통령 제25주년 광복절 경축사

친애하는 국내외 5천만 동포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이 비할데 없는 감격과 환희 속에 맞이했던 조국광복, 그날로부터 꼭 4반 세기가 되는 날입니다.

25년전 전국 방방곡곡의 거리 거리에서 태극기의 물결을 수 놓으며 자유해방 만세의 환호성을 소리높이 외치던 그날, 우리 온 겨레는 정녕 티끌만한 사심도 타산도 없는 순수한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다함께 우리 민족재기의 출발을 기뻐하였고 우리 역사의 새로운 광명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 억압과 예측에서 벗어나고 잃었던 조국을 되찾아,

” 다시는, 조상들이 당했던 불우한 처지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굳게 맹세하며,

” 새로운 번영의 민족국가를 건설해 보겠다는 푸른 꿈을 펼쳐 보던, 그날의 벅찬 감격과 불타오르던 정열은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될 불멸의 봉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로부터 어언 2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25년이란 세월은 한 인간이 유아기로부터 소년기와 청년기를 넘어서 이제 그 완숙을 눈앞에 바라보는 한 세대에 해당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한 민족, 한 국가에 있어서도 그간의 성장도를 엄숙히 평가해 보아야 할 역사상의 이정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제, 성년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내외에 크게 과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감회는 자못 무량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지난 25년간의 광복 한국사는 한마디로 말하여 드물게 보는 「격동의 시기」였고,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 광복의 감격과 환희가 조국분단의 충격과 불행 속에 하루 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는가 하면,

” 번영의 희망과 기대는 북한 공산집단이 도발한 참혹한 전란 속에 한 조각 허공에 뜬 구름처럼 흩어져 버렸고,

” 나아가서 정부수립 이후의 혼돈과 정체는 급기야 두차례의 정치적 격동의 소용돌이를 치루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타방에 의하여 주어진 광복을 분간 소화할 만한 주체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련과 진통은 피할 수 없었던 필연의 결과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비극을 당하여 결코 좌절하지 않았으며, 역경앞에 끝내 굴하지 않았습니다.

장구한 민족사를 통하여 수 없이 많았던 내외의 우환을 강인한 의지와 거족적인 항쟁으로 이겨내고 조국의 독립을 보전하여 왔던 굳세고도 억센 우리 민족 본연의 잠재적 역량이 시련극복의 도정에서 서서히 그 빛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싹터 오른 민족적 자각이 응결하여 잠자고 있던 생명력과 창조력에 점화되어 민족중

홍의 전진대열을 정비한 역사적 전환점을 이룩한 것이 바로 지난 1960년대였습니다.

그로부터 8, 9년! 우리들은 조국근대화 과업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온 세계는 50년대의 동란 한국이 이제 신생국 발전의 모범국가로 등장했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선망과 경외의 눈으로 쳐다보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도 값있게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거둔 외형적 성과보다도 이것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무한한 저력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떠한 큰 일도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과 긍지를 일깨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0년대에 착수한 중흥과업을 기필코 완수해야 할 사명의 70년대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4반세기의 역사의 장이 시작되려는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다시는 지난 날의 역사적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결의와 우리 후손들에게 보람찬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일층 드높여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광복 제2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 겨레가 너 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가슴아프고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국토분단의 비극입니다.

통일을 향한 민족적 비원은 지난 4반세기 동안 하루도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진 일이 없었으나, 한편 통일의 전망은 수많은 난관과 애로에 가로막혀 결코 밝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민족반역집단이 북한땅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광신적이며, 호전적인 공산집단은 조국광복의 첫날부터 전 한반도를 폭력으로 적화하기 위해서 시종일관 광분해 왔습니다.

6·25 남침의 참혹한 동족상잔에 이어서 휴전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7, 800여건이 넘는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고, 최근에는 무수한 무장공비를 남파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실증입니다.

정녕, 김일성과 그 도당은 마땅히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할 전범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도당은 언필칭 평화통일이니, 남북협상이니, 연방제니, 남북교류니 하는 등 파렴치한 상투적 선전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청천백일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전범행위와 긴장조성의 책임을 전가해 보려는 적반하장의 흉계인 것이며,

” 무장공비 남파를 위장, 은폐하고 소박한 일부 사람들을 현혹케 함으로써 감상적 통일론을 유발해 보려는 간사할 술책인 것이며,

” 국제여론의 오도를 노리는 야비한 속셈인 것입니다.

이 허위와 기만에 가득찬 북한공산집단의 작태를 믿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나는 단언합니다.

무릇, 공산주의의 정치체제는 기본인권의 유린과 철의 기울에 의한 전체주의적 일당 독재입

니다.

그 중에서도 김일성 체제는, 같은 공산권내에서조차도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형적인 극좌 모험주의와 역사위조를 일삼는 개인 신격화가 판을 치는 폐쇄사회입니다.

오늘의 북녘 땅은 그러한 전횡과 공포가 휩쓰는 가운데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하나의 병영으로 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듯 역사와 민족과 천륜과 양심을 외면한 흉악한 무력도발집단과 대치하여 통일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민족의 비원인 조국통일의 난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통일이 아무리 절실한 우리 민족의 지상명령이라 하더라도 동족의 유혈을 강요하는 전쟁만은 피하여야 하겠고, 통일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꾸준한 인내와 최대한의 양식을 발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지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김일성 일파의 전범집단이 끝내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폭력적인 침략을 감행하여 왔을 경우에는, 이를 단호히 격퇴할 수 있는 「힘의 배양」도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이미 수차례 걸쳐서 통일노력의 본격화는 70년대 후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기에 이르면 우리의 주체역량의 충실과 국제적 여건의 성숙으로 통일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으리라고 내다보고, 특히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체제도 시대의 진운인 자유화물결에 의해 스스로 변질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자유의 힘이 북녘까지 넘쳐 흐를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기를 전망하면서, 나는 광복 4반세기에 즈음한 뜻깊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접근방법에 관하여 나의 구상을 밝히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행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즉 북한 공산집단이 지금과 같은 침략적이며 도전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한,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이것은 가면이요, 위장이요, 기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긴장상태의 완화없이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에의 접근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를 보장하는 북한 공산집단의 명확한 태도표시와 그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무장공비 남파 등의 모든 전쟁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소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무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해 온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내외에 선언하고, 또한 이를 행동으로 실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북한 공산집단이 수락,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유엔」에 의해서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에는, 나는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한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의 민주·통일·독립과 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인정하고 「유엔」의 권위와 기능을 수락한다면,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이 참석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구상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더

이상 무고한 북한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즉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내외동포 여러분!

금년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19세기 후반의 개화기로부터 근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1세기, 우리 민족은 낙후와 예측과 전란과 혼돈이 겹친 수난을 이겨냈으며,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중흥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녕 마지막 중흥의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오늘로서 시작되는 앞으로의 4반세기를 넘기면 금세기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 2000년경의 세계와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을 좌표가 어디이겠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때의 우리 조국은,

” 국토통일을 이룩한 지 이미 오래된 강력한 민족국가로서,

” 온 국민이 다 함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풍부한 선진 복지국가로서,

” 세계사의 주류에 당당히 참여하고 기여해 나가는 보람찬 모습으로 변모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착실한 그 준비기간인 것입니다.

1970년대는 이렇듯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우리의 근대 민족사의 도정에서 민족중흥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대의 중흥과업을 성취하는 여부는 우리의 힘을 어느 만큼 「생산적」인 목표에 집결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민족의 단결, 힘의 집중, 그것은 정녕 민족중흥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인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이룩하는 것도 민족의 단결이며, 민족의 염원인 국토통일을 성취하는 것도 우리의 단결된 힘입니다.

국민 여러분!

25년전 8·15에 구가했던 그 감격과 환희를 앞으로 기어이 성취할 조국통일의 그날, 보다 더 벅차게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단결하여 전진합시다.

(2)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

/ 1973.6.23 박정희 대통령 특별성명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온 남북대화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추이에 비추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우리는 해방이 되었으나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국토는 양단되고 민족은 분열되었습니다.

당초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한 군사적 경계선이라고 하던 38선이 그후 철의 장막으로 변

하고 남과 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38선의 해소와 통일·민주 정부수립을 위한 교섭이 있었으나, 미·소간의 근본적 대립으로 실패에 돌아가고 결국 한국문제는 국제연합에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1947년 제2차 국제연합총회는 남북한을 통한 자유로운 총선거의 실시를 결의하고 이를 위해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로 남한에서만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국제연합에 의하여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게 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군의 불의의 침략으로 인한 한국동란으로 무수한 동포가 생명을 잃고 전국토는 초토화되었으며, 3년간의 전란끝에 휴전은 성립되었으나 분단은 계속되고 통일은 요원해졌습니다.

나는 이 분단으로 말미암아 동족의 고통을 덜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70년 「8·15 선언」에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다음해 8월 12일 우리측은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으며, 작년 7월 4일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리하여 남북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근 2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성과는 우리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이하고 실천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남북간의 장벽을 점차 제거하고,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서 상호간의 불신을 신뢰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대화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길이며,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불신요소를 남겨둔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군사 및 정치문제의 일괄 선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측은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진행중, 밖으로는 사실상 조국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현상으로 보아 우리가 기대하는 바 남북대화의 결실을 얻기까지에는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견되며, 상당히 긴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결과적으로 불신의 심화와 긴장의 고조마저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편, 최근의 국제정세는 제2차 세계대전후의 냉전시대가 끝나고 현상유지를 기조로 하는 열강들의 세력균형으로 평화공존을 유지하려는 것이 그 주된 조류라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일련의 주변정세의 발전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국토통일이 단기일내에 성취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지상의 염원과 목표를 국제정세의 현실속에서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 현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국내외의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확고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강인하게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이땅에 안착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자주역량

으로 통일을 기필코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 가입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제연합총회에서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중 대북한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둔다.

친애하는 남북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오늘의 내외정세를 냉엄히 평가할 때, 이 길만이 긴장완화의 국제조류 속에서 민족의 위신과 긍지를 유지하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 앞에는 결코 실망이나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찬 용기와 슬기로 한반도의 평화, 겨레의 번영,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해 힘치게 매진합시다.

(3)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천명

/ 1982.1.22 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

그동안 펼쳐진 역사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쌍방중 어느 일방이 자기의 사상·이념·제도를 앞세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통일만을 고집하는 한 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은 장구한 세월을 걸쳐 한 핏줄, 한 역사, 같은 문화와 같은 전통을 이어 온 하나의 민족이라는 입장에 서서 이를 해결하려 할 때라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은 어느 특정계층이나 집단에 의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주도되어서도 안되고, 무력 또는 폭력의 방법으로 추구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본인이 지난해 1월 12일과 6월 5일 두차례에 걸쳐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과 직접 회담을 제의했던 것도 바로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길을 허심탄회하

게 찾아 보자는 데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의가 실현되도록 지금까지 기울여 온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본인은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실현될 경우 제시하려고 구상했던 통일방안을 밝힘으로써 북한당국과 전세계에 대하여 우리의 참뜻을 이해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한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전체의 통일 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통일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서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헌법을 기초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통일헌법 초안이 마련되면 쌍방은 남북한 전역에 걸쳐 민주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통일헌법을 확정·공포하고 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대망의 통일국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조국의 정치이념과 국호·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정부형태와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과 시기 및 절차등은 민족통일협의회의가 구성되어 쌍방이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토의, 합의할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은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제시될 것입니다.

북한측이 진정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그들이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정정당당하게 내어 놓고 우리측의 초안과 비교·검토하는 가운데 하나의 단일안을 만드는 절차에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 쌍방간에 이같은 통일헌법의 마련을 위한 역사적인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우선 신뢰가 조성되어야 하고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착실하게 해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남북 쌍방은 그동안의 민족 자해적이며 비정상적인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하루속히 민족적 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민족 자애적인 정상관계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본인은 남북 쌍방이 무엇보다도 상호관계를 정상화하고 이 기초 위에서 민족화합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희망하면서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서 다음의 합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첫째, 쌍방은 장차 통일국가가 수립될 때까지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둘째, 쌍방은 쌍방간 분쟁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셋째, 쌍방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현존하는 상이한 정치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 인정하며 서로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일체 간섭하지 아니한다.

넷째,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하여 현존 휴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경쟁의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조치를 협의한다.

다섯째, 쌍방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며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이산가족의 인도적 재회문제를 포함해서 남북간의 자유로운 인적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

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역·교통·우편·통신·체육·학술·교육·문화·보도·보건·기술·환경보전 등 제분야에서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다.

여섯째, 쌍방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상·이념·제도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전세계 모든 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모든 쌍무적 및 다자간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한다.

일곱째, 쌍방은 각료급 전권대표를 임명하여 각기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 쌍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락대표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자기측 관할영역에 주재하는 상대방 연락대표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본인은 북한측이 하루속히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에 호응하여 이 자리에서 이상의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본인은 조속한 시일안에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쌍방의 고위대표간에 예비회담을 개최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간의 회담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정부는 만약 북한측이 이같은 예비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한다면 이 예비회담에 소정의 대표단을 파견할 모든 준비를 이미 갖추어 놓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 두고자 합니다.

(4)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 대통령 특별선언』

/ 1988.7.7 노태우 대통령 특별성명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온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새 공화국의 정책을 밝히려 합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분단의 고통을 겪어온지 반세기가 가까와 옵니다.

분단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슬한 시련과 고난을 주었으며,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남북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번영된 통일조국을 여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겨레 모두에게 맡겨진 민족사의 소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분단된 남북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루었으며,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 그날부터 오늘까지 서로가 서로를 불신·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고통스런 분단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나 민족통합은 우리의 책임아래 우리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민족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전쟁의 위험과 대결의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가 아직 비극적인 분단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민족공

동체라는 의식을 등진채 서로를 대결의 상대로 여겨 적대관계를 격화시켜 온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겨레의 힘과 슬기를 모아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빛나는 역사와 문화전통을 창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번영된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 길이 곧 민족자존의 길이며 민족화합의 길입니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해 나갈 적극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결의 관계를 지양해야 합니다. 북한이 책임있는 성원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그것이 북한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은 상호간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합니다.

1.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2.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의 생사·주소확인, 서신거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지원한다.
3.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
4.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5.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6.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나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조치에 대해 북한측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측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온다면 보다 전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나는 오늘의 이 선언이 통일을 향한 남북간의 관계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천만 우리 겨레 모두가 슬기와 힘을 모은다면, 이 세기가 가기전에 남과 북은 하나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우리는 머지 않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5)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천명
/ 1989.9.11 노태우 대통령 국회특별연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147회 정기국회의 개회를 축하합니다.

이번 국회는 파란과 성취가 교차한 1980년대를 마무리 짓고 희망의 90년대를 여는 뜻깊은 정기국회라고 생각하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많은 결실이 이번 국회에서 거두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이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민족사의 소망이며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실현할 방안을 밝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시련으로 시작된 20세기를 영광으로 마무리지어야 할 이 세기의 마지막 연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세기에 들어서면서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힘이 모자라 끝내 나라를 잃고 만 우리 민족은 해방의 날을 맞았음에도 그 불운의 연장선상에서 국토분단과 동족상잔의 엄청난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와 힘을 모아 민족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길을 열어 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양단한 이 분단의 아픔은 우리들 다음 세대, 다음 세기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겨레의 뜻과 열망을 한데 모아 통일의 횃불을 높이 들고 민족통일의 길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이야말로 우리의 넘치는 민족적 역량으로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는 역사적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정치·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우리 스스로 이를 수 있는 당당한 힘을 쌓았고 그것을 실천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불바다가 되었던 갯더미 위에서 일어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 10대 무역국가에 들어선 신흥 산업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민주주의의 새로운 활력 속에 서울올림픽을 사상 가장 훌륭한 대회로 치렀습니다.

동서남북 세계 160개국의 젊은이들이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교의 벽을 넘어 서울의 한마당에 모인 이 인류화합의 대축제는 국제질서 속에서 피동적인 존재로 비쳐 서있던 우리 민족이 세계에 화해의 물결을 주도한 위업이었습니다.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같은 성취에 힘입어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협력하는 적극적인 관계를 이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 동구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일고 있는 개방과 개혁의 물결은 그들 내부 체제와 정책의 변화는 물론, 국제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몰아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단을 안겨 주었고 그것을 40여년 고착시켰던 세계의 질서와 힘의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같은 거대한 안팎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작년 7월 남북한이 이 이상 적대·대결하는 상대가 아니라 공동의 번영을 향해 협력해 가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상을 전세계에 밝혔습니다.

북한을 폐쇄와 고립으로부터 개방으로 이끌어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고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정책은 동서세계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40여년의 세월 동안 우리 스스로와 세계를 바꾸어 놓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장애가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한반도를 가르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으며 긴장과 대결은 늦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천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네 번을 거듭하여도 북한을 지배해 온 경직된 체제는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거대한 물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공산화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기본전략이나, 모든 것이 통제된 북한사회 내부도 아직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열정은 뜨겁지만 우리가 맞고 있는 분단현실은 이처럼 냉엄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북한은 도도한 세계적 변화의 물결이 도달하는 마지막 해안이 될른지는 모르나, 결코 이 물결을 끝내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폐쇄노선에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북한은 변화의 물결에 순응하여 끝내는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앞당겨 지도록 돕고 이끌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땀과 인내, 겨레의 슬기와 뭉친 힘이 들어가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쏟아 그들이 통일의 길로 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작년 10월 4일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겨레의 뜻을 모아 새로운 정세변화에 부응하여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방안을 밝히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국민들의 광범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국회공청회를 거쳐 겨레의 소망을 실현할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는 엄숙한 의무에 따라 저는 남북이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통일된 우리의 조국은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합니다.

민족성원 모두의 참여와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다양한 주의·주장이 자유로이 표현되고 대변되는 민주공화체제는 온 겨레의 오랜 소망이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통일된 나라의 유일하 선택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된 조국에서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집단, 어느 계급도 특권이나 주도적인 지

위를 누리거나 독재로 전횡하는 일은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된 조국은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며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을 보장하면서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를 이루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리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통일된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여야 하며, 이것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개의 나라를 영속시키는 형태는 온존한 통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통일은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과 북이 분단 40여년간 누적된 깊은 불신과 오랜 대결·적대의 관계를 그대로 두고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단이 있기까지 5천년의 긴 역사를 통해 한 핏줄, 같은 언어, 같은 문화전통, 그리고 같은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왔습니다.

이 민족공동체가말로 현재도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바탕이며 우리 민족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이자 이를 보장하는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분단은 좌우익 간의 유혈투쟁과 6·25남침으로 인한 동족간의 처절한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의 분열로 심화되었습니다.

적대하는 두 체제로 나뉘어 반세기 가까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북의 거래는 생활양식과 가치관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민족공동체를 올바르게 회복·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간에 개방과 교류·협력을 넓혀 신뢰를 심어 민족국가로 통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남북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정치적 통합의 여건은 성숙될 것입니다.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현장에 따라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합체제 아래에서 남과 북은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토록 하여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과정의 과도적 통일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남북연합은 최고 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와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북은 각료회의와 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 사항 이행 등 실무를 위해 공동사무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구역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구역은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인도,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분야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간의 모든 현안과 민족문제를 협의·조정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되 구체적으로는 각 상임위원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으로는 1천만 이산가족의 재결합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외교분야에서는 남북간에 정치적 대결상황을 완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역량의 쓸모없는 낭비를 막으며 해외동포의 권익은 물론 민족적 이익을 함께 신장시킬 것입니다.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우선 남북사회의 개방과 다각적인 교류·교역·협력을 추진하고 민족문화를 함께 창달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번영의 경제권을 형성하면 남북 모두의 발전을 이루고 민족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분야에서는 과도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평의회’는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되, 통일헌법의 기초와 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각료회의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평의회’는 통일헌법의 기초과정에서 통일국가의 정치이념·국호·국가형태 등을 논의하고,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정부형태는 물론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시기절차 등을 토의하여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은 각기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남북평의회’에 내놓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헌법안이 마련되면,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통일조국의 국회는 지역대표성에 입각한 상원과 국민대표성에 입각한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우리 겨레의 이상과 의사에 맞고, 남북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새 공화국 출범 이후 저는 남북간에 화해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남북의 정상들이 서로 만나는 것임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열려 본격적인 남북협력과 통일의 시대를 열 현장에 합의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현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상호 불가침에 관한 사항,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담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 속히 이같은 민족공동체 현장이 마련되어 온 겨레 앞에 공포되기를 기대합니다. 분단 45년이 되는 내년 8월 15일까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열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사에 통일을 이룩하는 새로운 장을 펼쳐 우리 세대에게 부여된 역사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유럽의 여러 민족과 국가들은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함께 번영을 일구는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프랑스·서독·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공동체 국가들은 지난 날의 적대와 대결을 동반자의 관계로 바꾸어 1992년 완전한 경제통합체를 이루며 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지배 아래서도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지켜왔던 우리가 분단의 벽을 넘어 수천년 이어온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들도 자유와 인권의 폭을 넓히며 다양한 의사를 대표하는 복수정당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이념과 체제를 떠난 보편적 가치입니다.

나는 민족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우리의 북한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들이 이같은 조처를 취하지 않고는 개방의 길로 나설 수도 없고, 우리와 교류·협력·연합하여 민족공동체에 합류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은 말로만 평화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적화통일 노선을 실질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자주·평화·민주적 통일의 길은 열릴 수 없습니다.

나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할 이같은 일을 실천할 경우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기원을 여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분단의 장벽이 높고 두터운 만큼 통일의 길은 험난합니다. 분단의 고통과 비극이 큰 만큼, 그것을 가시게 하는 데는 우리의 더 큰 역량과 지혜, 무한한 참을성과 피땀을 쏟아야 합니다.

이 모든 준엄한 현실을 외면한 안일한 환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은 조국의 통일이 아니라 겨레의 더 긴 시련일 뿐입니다.

민족문제를 해결할 통일에 관한 한, 우리의 내부적인 이견과 갈등, 반목과 분열을 민주주의의 거대한 용광로 속에 녹여 무쇠와 같은 민족의 통일 의지를 창조해 내어야 합니다.

민주번영으로 우리의 통일역량이 더한층 커질 때 분단의 벽은 무너질 것이며, 겨레의 단합된 힘이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이겨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겨레의 보람 위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가장 훌륭한 올림픽이 이 땅에서 열렸듯이, 온 민족의 지성이 응집되어 통일의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온 겨레의 염원을 담은 통일방안을 밝히면서 통일의 빛나는 그날을 여러분과 함께, 7천만 동포 모두와 함께 힘차게 열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6)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천명
/ 1994.8.15 김영삼 대통령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제49주년 광복절을 국민과 더불어 경축합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두번째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과거 어느때 보다 조국의 장래에 대해 희망과 용기에 차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변화와 개혁, 개방과 진진을 향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깨끗한 정부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상해 임정청사를 복원하고, 애국선열들의 유해를 고국땅에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그 어느때 보다 확고해졌습니다.

민족의 정기는 되살아나고 있으며, 우리는 민족진운의 역사를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 맞추어, 새로운 문명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아시아·태평양시대, 새로운 문명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까지나 헤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뜻과 원기를 한군데로 모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되어, 새로운 문명을 선도하는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7천만 내외동포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7천만 민족의 안전과 생존, 그리고 통일과 번영에 대한 책임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7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책임을 통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사와 남북관계의 흐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나는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다시한번 가다듬고자 합니다.

지난 1세기동안 우리는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광복은 민주주의가 꽃피고, 번영이 넘치는 통일된 나라를 이룩할 때 완성됩니다.

세계사는 이미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하였고,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민주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민주주의의 기틀이 이 땅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았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이렇듯 어렵게 확립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수호될 것입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통일을 추진하는 우리의 기본철학 역시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없는 민주가 있을 수 없고, 민주 없이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위에서, 민족의 자주적 역량으로 냉전과 분단을 극복하고, 민

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만드시 이룩해야 합니다.

통일은 어떻게 권력을 배분하느냐 보다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통일은 계급이나 집단중심의 이념보다도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가공적인 국가체제의 조립보다도,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 건설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일은 오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아래서 반목과 불신을 쌓아온 남과 북이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하나의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를 거쳐서, <1민족 1국가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남과 북은 적대와 대립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예멘이 정치적 통일을 이루고도 내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화해와 협력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외형만의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존공영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남북연합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킴으로써 정치적 통합을 위한 여건을 성숙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은 통일의 중간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1민족 1국가로 통일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통일의 길은 민주와 번영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된 조국은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내외동포 여러분!

이제 한반도에서도 냉전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체제경쟁도 이미 끝났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로 귀결된 20세기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인류는 이미 냉전 대신에, 자유화, 복지화,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대세 앞에 한반도만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구시대적 대남 적화전략을 마땅히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을 개선하는 과감한 개혁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산가족문제를 기본적으로 인권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 억류자 문제의 해결에도 지체 없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허한 이념의 대결 대신에 민족의 복리증진을 남북관계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를 하나씩 갖추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정권 탄생이후 처음으로 권력승계 작업을 진행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안정 속에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국정부와 국민은 같은 민족으로서 할 수 있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이 협력 속에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여,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때, 자연스런 통일, 바람직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결코 민족공동체의 선진국 진입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창의와 능력을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은 신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신뢰는 서로가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실천에 옮기는 데서 생겨납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세계와 민족 앞에 그 실천을 약속한 화해와 협력의 대장전입니다.

지난 1년여동안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핵문제의 해결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준수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남북간의 화해 분위기를 위배하는 상호비방은 중지되어야 하며,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 속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북한의 고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을 무기로 하는 폐쇄지향의 모험을 중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평화적 핵에너지의 개발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첫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이 언제, 어떻게 오더라도, 통일은 결국 남과 북의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 발전시키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부터 모범적인 민주공동체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에의 영광과 환희 뿐만이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고통과 희생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의 문제는 곧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같은 민족으로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의연하고도 한결같은 자세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내외동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반세기를 돌아볼 때, 우리는 벅찬 감동과 함께 부끄러운 반성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그리고 남북에서 우리 민족이 걸어온 고난의 역정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내년에 맞는 광복 50주년은 우리 민족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나는 광복 50주년을 한마음 한뜻으로 「7천만의 한민족 시대」를 여는 계기로 삼을 것을 내
외동포 앞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민족은 식민시대의 압제를 뚫고 민족의 광복을 성취해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해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냈습니다.

그 연장선 위에서, 이제 우리는 민주와 번영이 넘쳐 흐르는 통일조국, 신한국을 마침내 창조
해내야 합니다.

선열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는 제2의 광복을 위해 땀을 흘려야 합
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선열과 우리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꿈꾸어왔던 통일되고 번영된 조국을 우
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새로운 세계문명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제2의 광복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우리 모두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